

한전공대, 대선공약맞나?...정상개교 '빨간불'

3개월 내 특별법 제정·시행령 공포...특수법인 전환 마쳐야
오는 5월 입학전형 발표 못하면 내년 3월 정상개교 불투명
정부 재정지원 근거, 전기사업법 개정령 '속빈 강정'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이 해를 넘긴 데다가 학교법인 한전공대의 특수법인 전환과 입학전형은 오는 5월까지 발표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전공대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려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설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7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와 교육계에 따르면, 2월 제384회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통과해도 5월 입학전형과 수시모집 요강 발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최우선 과제인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0월15일 국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을 포함한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야당(국

민의힘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법안 통과와 1차 관문인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민주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이다.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기존 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

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에 맞춰 입법을 추진 중인 시행령의 경우도 2월부터 4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까지 고려하면 5월 이전 시행령 공포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2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공포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놓고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23일 산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공공기관(한국전력)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명시했지만 정작 공포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최근 공포된 개정령 조항은 '전력산업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정 전 법조문 '전문인력 양성'과 개정 후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차별성이 없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준조세 형태의 전력산업기금 누적 적립액은 2019년 말 기준 4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이뤄진 것이 없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광주·전남 지역 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매년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서 정상개교를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장흥군은 17일 코로나 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식사중 대화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식당가를 돌며 식사중 대화금지 스티커를 뿌리고 있다. (사진=장흥군 제공)

'코로나 청정' 장흥군, 생생 아이디어 눈에 띄네

장흥군이 코로나 19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1년간 단 한명도 코로나 감염자가 없었던 강진군에서 3명의 확진자 발생한 가운데 이웃 장흥군도 비상이 걸렸다.

'식사중 눈으로만 말하고 식 후 대화' 기본 캠페인
발판소독기·호루라기 방역단·자치경찰TF 등 실시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장흥군이 이웃 강진군의 감염소식에 차단 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장흥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체코에서 귀

국한 20대의 여성이 확진된 뒤 단 한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장흥군은 그동안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극복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 '식사중 대화 금지' 캠페인을 범군민

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식당에서 5인 이하 자리를 하는 것은 정적이 되고 있지만, 식사중 대화가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식사

중 눈으로 말하고 식후 대화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전 식당에 제작된 스티커를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그동안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발판소독기를 비치하고 학생 호루라기 방역단, '자치경찰 TF팀' 등을 꾸려 코로나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정 군수는 "신발바닥에 바이러스가 24시간 이상 남아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조언이 있어 발판소독기를 비치하게 됐다"면서 "자치경찰 TF팀은 외지에서 오는 바다낚시객에게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수준 등을 적극 고지하는 한편 낚시 후 곧바로 장흥을 벗어나게 하는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코로나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호루라기 방역단은 전통시장, 터미널, 식당,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마스크가 없는 주민이 보이면 호루라기 호출로 주위를 환기시킨 뒤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배부한다.

정 군수는 "호루라기 호출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을 맞은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1석2조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그들아! 이번 설날은 오지 말고 용돈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현수막), 장흥군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2월12일)을 앞두고 '고향 방문 자체 범 군민운동'도 계속 벌인다.

장흥=김도영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